광주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공동여론조사

건설 여부·방식 이달내 결정
市, 150여 시민단체 대상
첫 설명회 열어 의견수렴 나서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시의회와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이번 달 내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9일 "시의회와 공동 여론조사를 잠정 합의한 만큼 시민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과 재검토의 필요성, 타지역 사례,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교통 정책 등을 설명 드리는 TV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이라면서 "늦어도 17일까지 해당 일정을 최종 결정하고, 이달 안에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게 시의 내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일단 지난 7일 서구 상무지구 NGO센터에서 지역 내 150여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추진경과와 재검토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 제공과 함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맞서 언성을 높이는 등 열띤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국민 세금 1조9053억원(국비 60%, 시비 40%)이 들어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건설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장현 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의 수요 예측조사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교통 수요와 공사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재점검 과정에서 노선과 건설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전체 공사비용의 최대 10%인 2000억원 안팎의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건설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게 광주시의 방침이다.

시는 일단 현재 진행중인 시의회의 광주시·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8일 이후 TV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여론조사는 이번 달 내 실시를 목표로 설문 문구와 방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여론조사는 미건설과 노면구간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원안 건설 등 3가지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계획대로라면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서구, 남구 등 44곳의 정거장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km로 건설되며,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완공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회 유가족 농성장 철거 지난 7일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8일 본청 2층 정문 앞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을 말끔히 정리했다. 아래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청 2층 정문 모습. /연합뉴스

205일만에…세월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했다던 '진도 피해지역 지원' 명시 없어 주민들 우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의 주축이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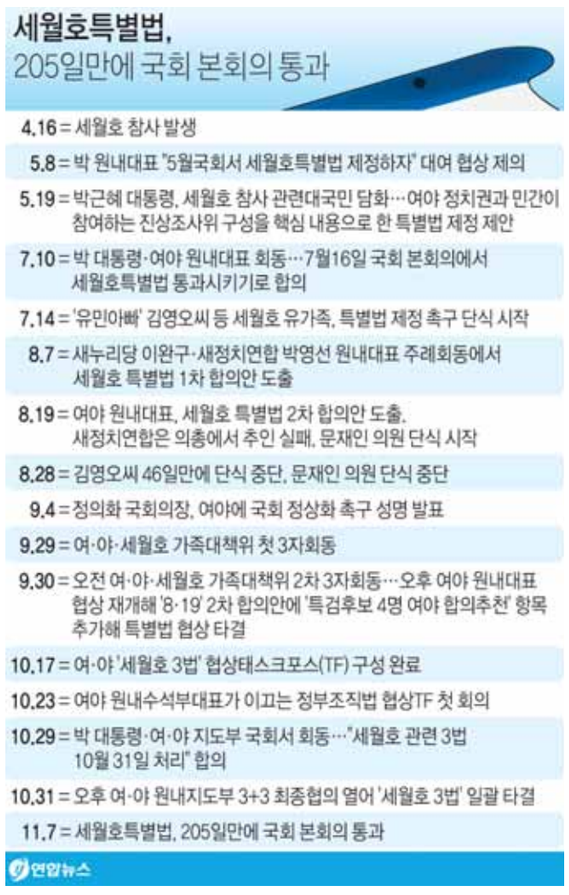
또 이른바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도군과 주민들은 진통 끝에 법안이 통과된 것을 반기면서도 애초 여야 합의 발표와 달리 특별법에 '진도지역 피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진도군 입장에선 피해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된 특별법에 '진도군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진도지역에 대한 배상,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발표 시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특별위원회 산하 지원소위원회에서 진도군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산국회 핫 이슈 부상한 무상급식·무상보육

여 "법 한도 넘어선 지원은 못한다"
야 "박근혜 예산 5조 깎아 지원을"

무상 급식과 무상 복지가 '예산 국회'의 핫 이슈로 부상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비 무상 지원(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교육청의 현장 갈등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주 중반부터 이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돼온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력전을 치를 태세다.

여당은 정부 편에서, 야권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편에서 일종의 '대리전' 성격마저 보이고 있다. 당정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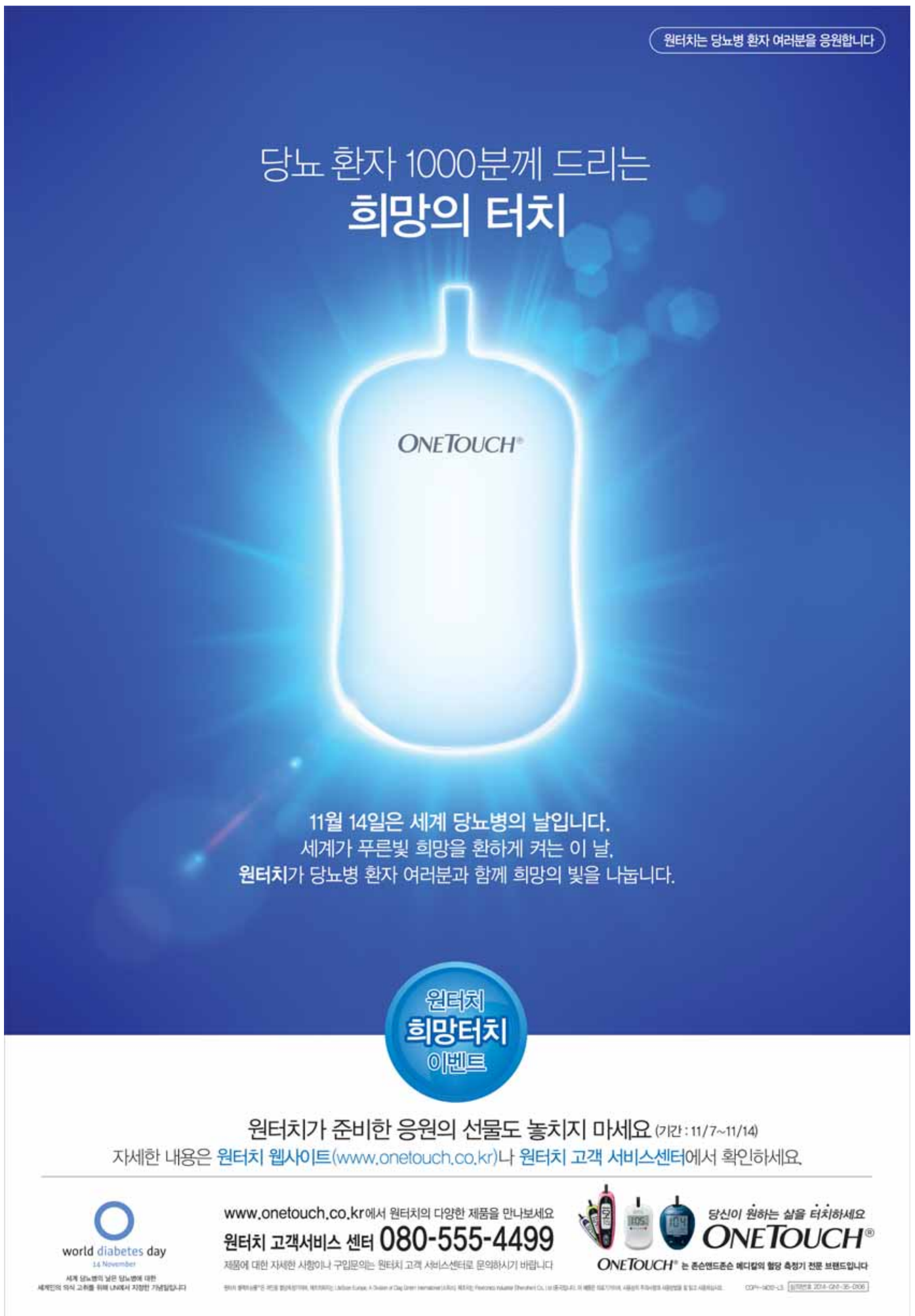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국정 철학, 정체성, 정국 주도권 향배 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타개가 쉽지 않다. 당장 예산 국회 마지막까지 격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야당은 무상 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박근혜 예산' 5조 원가량을 삭감해 생기는 재원을 무상보육·급식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의 복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다만, 당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무상 보육 예산을 부담할 재원이 없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채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 정부와 교육청, 야당은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슈퍼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강력한 수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도 무상복지 문제와 뒤엉킬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정부가 4대강 사업, 국외 자원개발, 방위사업 비리로 새어 나간 100조 원을 복지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과 국외 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내 친이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친박 주류의 구심점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조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